

(2021.5.24 월) ‘유동성 잔치 뒤의 숙취’ 경고한 미국 물가 급등(한겨레)

(숙취 : 술 등 알코올 음료를 자신의 대사 능력 이상으로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쾌한 신체적 상태를 말함. 종종 멀미와 두통 등 현저한 불쾌감을 동반)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전후해 세계 금융시장이 한바탕 요동쳤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자 주가가 급락하고,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그동안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타격에도 아랑곳없이, 초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쉼 없는 상승에 취해왔다.

이번 미국소비자물가 급등이 불러일으킨 금융시장의 충격은 ‘유동성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잊고 있던 ‘후유증’에 대비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미국 노동부 발표를 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달에 견줘 0.8% 상승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나 올랐다.

13년만에 가장 높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3.0%나 올랐다.

연준(Federal Reserve System : 연방준비제도)은 지난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관리목표인 2%를 넘더라도 ‘상당 기간’ 이를 용인하는 ‘2%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물가 급등으로 새 통화정책 아래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지나친 걱정이란 시각도 있다.

4월 물가 급등은 비교 기준인 지난해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최근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탓도 크다.

리처드 클래리다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오히려 고용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도 미국 물가 급등이 “공급 부족, 이연 수요 등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물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점치기는 어렵지만, 시장금리가 상승으로 돌아선 지 꽤 됐고 물가 상승과 함께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8월 연 0.6%가량이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13일 1.68%로 올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0.6%에서 1.65%로 올랐다.

부동산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주가 또한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호전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이미 너무 올랐다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숙취는 잔치가 끝난 뒤에 찾아온다는 점을 되새길 때다.

(2021.5.25 화) '참 좋은 나라'(중앙일보)

빚더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통령은 일단 외면하는 중이다.

며칠 전 특별 연설에서 빼버렸다.

하지만 국회엔 '은행 빚 탕감법' 이 상정돼 논란이다.

정부와 여당은 120조원이 넘는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올 9월까지 연장했다.

지금까진 은행 팔을 비틀었다.

이젠 감면·탕감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물론 못 할 거야 없다.

'어린이 용돈' 까지 챙겨주겠다는 나라다.

10억원 예산으로 초등학생에게 매달 2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이다.

어린이의 기본 소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건데 재정 자립도가 겨우 10% 남짓한 구청이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의 별도 '어르신 공로 수당' 을 추가 지급하는 곳도 있다.

경기도는 '청년 면접 수당' 을 30만원으로 늘렸다.

좋은 나라다.

코로나 재앙 앞에 못 할 게 뭐 있나.

그렇다 치자.

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가 아마도 끝날 내년엔 더 좋은 나라가 오는 모양이다.

대선판에 불러 나온 '20세 1억원' 은 '국민 1인당 능력 개발비 2000만원' , '군 제대 연 100만원 국민 기본소득' 은 '연 600만원' 으로 벌써 추가 엔진을 달았다.

곧 주택이든 자산이든 대출이든 기본 시리즈가 줄을 설 게 틀림없다.

제2, 제3의 가덕도는 지역마다 흘러넘칠 것이다.

어차피 내 돈 드는 일은 아니다.

더 무책임한 쪽이 이기는 선거판이다.

말만으론 돈 안 든다.

하지만 실제라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럼 돈은?

더 큰 빚을 내자는 거다.

그 다음 대책은?

대마불사(大馬不死: 큰말은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살 길이 생긴다는 의미)다.

미국을 보라고 한다.

물론 두 나라가 같은 천조국으로 불리긴 한다.

미국은 원조 천조국이다.

신하 나라가 천자 나라를 상국 모시듯 한다고 해서 ‘미국은 천조(天朝)’ 라고들 불렀다.

미국 국방비가 한때 천조(千兆)원 가까이 되기도 했다.

우린 빚 천조국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대마불사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우린 미국이 아니다.

게다가 역사책엔 설사 미국이라도 빚 앞엔 장사 없다고 쓰여 있다.

‘영원한 제국’ 로마가 무너진 진짜 원인은 이민족 침략이 아니라 과도한 재정지출로 경제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황제들이 돈을 펄펄 쓰다 빚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나중엔 돈을 그냥 찍어냈다.

네로 황제는 금 성분이 하나도 없는 도금 화폐를 뿌렸다.

거대 인플레이션을 마구 일으켜 황제와 나랏 빚이 셀프 탕감되긴 했다.

하지만 골병든 제국은 결국 암으로 신음 댔다.

데이비드 랜즈는 『국가의 부와 빈곤』에서 "스페인은 돈이 너무 많아서 가난해졌다"고 썼다.

같은 얘기다.



[코로나19 전 서울 명동의 거리]



[코로나 19 후 서울 명동의 거리]

빛 탕감의 목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이긴 하다.

명동을 걷다 보면 누구나 느낀다.

그렇다고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와 무관한 나랏 빛이야 더 말할 게 없다.

고교졸업생에게 세계여행비 주겠다고 나라가 빛을 지면 누가 갚나.

최소한 빛 갚을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나.

빛 탕감법이 아니다.

빛을 더 늘리지 않는 법이 먼저다.

전 세계 90개 넘는 나라가 그런 재정준칙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우리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엔 들어 있다.

국회에서 잠만 자니 문제다.

대선(대통령 선거) 출정식 같은 지지 모임과 출마 선언이 빼곡하게 이어진 1주일이었다.

더 늦기 전에 재정준칙이 나와야 그 안에서 치고받을 수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는데 한 평생이 필요하다’는 세네카의 말이 있기는 하다.

나라 경영을 배우느라 잠재웠는지 모르지만 이젠 정권 막바지다.

나라 거덜 내는 길을 훤히 알 만한 때다.

공돈으로 세계 여행하는 건 누구나 바란다.

하지만 분수 넘치게 사는 일이다.

몇 년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IMF에 손 벌리며 한말이다.

‘우린 분수 넘치게 살았다’ .

하물며 빛으로 그런다면.

(2021.5.26 수)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만들려는 이유(동아일보) ₩보너스 : 각 100원₩



거리에 연료통 없는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들이다.

전기차는 연료통 대신 무거운 배터리를 밑에 깔고 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채우는 대신 충전기를 꽂아서 저장한 전기 에너지의 힘으로 달린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의 연료통을 대체하는 것일까.

운전자 눈에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기차에 쓰이는 고전압 배터리는 연료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을 한다.

전기차 경쟁력은 배터리가 좌우한다.

부피와 중량은 줄이되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순간적으로 큰 힘을 뽑아 쓸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이른다.

양전히 기름 잘 담고 있으면 되는 연료통과는 비교 불가다.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이 하던 역할의 상당 부분을 이미 넘겨받았다.

한국과 중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여기에 끼어들겠다는 선언이 미국과 독일에서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와 올해,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 자신들이 생산하는 차에 넣는 이른바 '내재화' 계획을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은 결코 쉽지 않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대세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과 전자가 이동하면서 충·방전된다.

이런 화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때때로 화재까지 일으키는 불안정한 물질을 활용하는 고전압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해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요구되는 공정의 정밀도도 자동차 생산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걸 모를 리 없는 자동차 기업들이 내재화를 외치는 이유는 “안 할 수 없다”에 가까워 보인다.

전기차 원가의 30~40%에 이르는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의 엔진·변속기보다 훨씬 비중이 크다.

이걸 모두 사와야 하는 완성차 기업은 차(車) 떴고 장기 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들 만하다.

배터리 가격은 갈수록 떨어지겠지만 가장 비싼 부품을 밖에서 사오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모든 완성차 기업의 처지가 같다면 견뎌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기업이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배터리 제조 마진을 확 줄이면서 가격 싸움을 걸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완성차 기업은 배터리 직접 생산이나 최소한의 기술 확보에 등 떠밀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사실, 배터리만의 얘기가 아니다.

기계 공학의 결정체였던 자동차는 지금 첨단 산업의 복합체로 변모 하는 길 어디쯤을 굴러가고 있다.

실내 공간에서 비중이 커지는 첨단 디스플레이 장치,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와 카메라, 각종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역량이 모두 자동차라는 플랫폼에 올라타고 있다.

이걸 안 태울 수가 없는데 무턱대고 태우다가 자칫 꺾이기 조립하는 역할만 남는 건 아닐까.

전기차를 앞세운 미래차 물결이 완성차 기업을 고민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질문 :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만들려는 이유를 두 가지로 기술하십시오.

답 : ①

답 : ②

(2021.5.27 목) ‘광주 계엄군’ 의 용기로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5·18(경향신문) ₩보너스 100원W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활동 시작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조사위는 12일 5·18진상규명특별법의 11개 법정과제 중 7개 과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광주에 투입된 장병들로부터 의미있는 증언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 십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증언한 이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이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했다는 장병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제3공수여단은 1980년 5월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과 주요 건물 옥상·감시탑 등에 M60기관총을 설치하고, M16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들을 살상했다.

의미가 작지 않은 가해자의 진술이다.

M16 총상이 아니면 시민군이 사용한 카빈총 총상으로 분류해 폭동 혐의를 씌운 신군부의 사실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조사위는 군이 ‘광주 봉쇄’ 과정에서 민간인을 수십 차례 사살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광주교도소 양쪽, 광주~순천 간 고속도로 등을 오가는 차량과 민간인을 상대로 최소 13차례 피격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광주교도소 일대에서 최소 41구, 주남마을에서 최소 6구의 시신이 사라졌고, 송암동 일대에서도 8구 이상의 시신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적 중인 행불자를 55구나 특정한 것이다.

조사위는 증언이 나온 신군부의 ‘사체처리반’ 운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교도소가 발간한 책자에 실린 “5월23일 오후에 죽어간 사람들의 시체와 부상당한 사람들을 헬기가 와서 어디론가 실어갔다” 는 당시 교도관 진술도 규명이 필요하다.

조사위는 1980년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2만 353명 중 200여명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원치 않게 진압에 가담한 장병들이 용기있게 증언에 나섬으로써 그날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은 뜻깊다.

송선대 위원장은 “시위대를 조준사격한 병사가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3월엔 당시 계엄군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죄와 용서를 구한 일도 있었다.

조사위 활동이 진상규명은 물론 해원(解冤: 원통한 마음을 풀)과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위는 당시 계엄군의 10%인 2000여명의 증언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



M60 : 유효사거리 1,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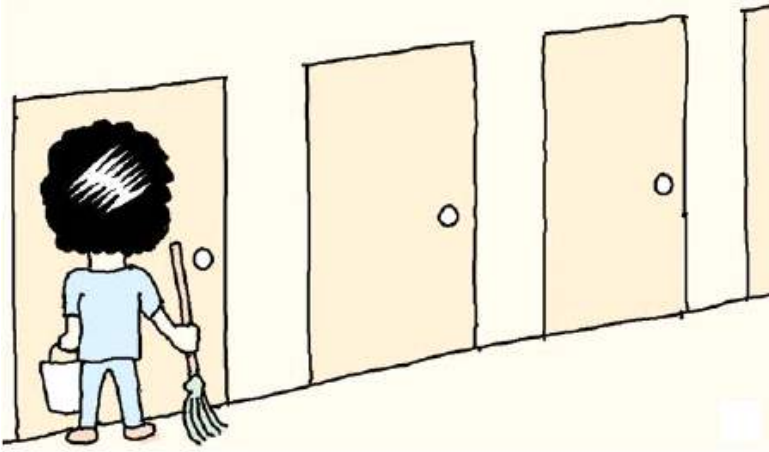


M16 : 유효사거리 550m

질문 : 5.18민주화운동은 몇 년도에 발생했나요?

답 : _____ 년

(2021.5.28 금) 휴게소 공중화장실에서 가장 깨끗한 칸은? (조선일보) ₩보너스 각 100원₩



공중화장실(public restroom) 청소를 하는 분들은 일을 하러 들어갔을 때 어느 칸에 사람이 들어앉아 있을지 경험적으로 안다고(know it from experience) 한다.

남자 화장실(men's room)의 경우, 작은 일을 보는(do number one) 소변기(urinal)는 곧바로 눈에 띄지만(come in sight at once), 큰 일을 보러(do number two) 들어가는 화장실 칸은 비어 있는지(be vacant), 사용 중인지(be occupied)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를 담당하는(be in charge of cleaning) 분들은 통계적으로(in the statistics) 어느 칸들을 나중에 청소해야 할지 미리 안다.

가장 깨끗한 칸은 어느 것일까.

가능하면 중간에 있는 칸들은 피하고(avoid the middle stalls if possible), 첫째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

사람들 대부분이 화장실에 들어서서 첫째 칸은 무심코 지나쳐(carelessly pass by) 사용 빈도(frequency of use)가 가장 낮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다.

병리학자(pathologist)인 미국 뉴욕대학교의 필립 티어노 교수는 “사람들은 입구 앞쪽 칸들은 회피하고(avoid the stalls up front) 더 안쪽 후미진 구역에 있는(be in the more sequestered section) 칸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고 말한다.

이 같은 현상은 화장지가 얼마나 자주 교환되는지 추적 조사한(track how often the toilet papers are changed) 결과에서도 입증됐다.

종이가 떨어진 두루마리(finished roll)의 60%는 중간 칸들에서 나온 데 비해 입구 앞쪽과 안쪽 칸에서 나온 것은 합쳐봐야 40% 남짓이었다.

한 걸음 더 나가서(take a step forward) 남성과 여성의 선호도를 분석해본(analyze the preferences of men and women) 결과도 비슷했다.

남녀 불문하고(regardless of sex) 대부분 가운데 칸들을 선호하는(prefer the middle stalls)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가장 안쪽 멀리 있는 칸을 찾아가는(seek for what's furthest away) 경향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앞쪽과 안쪽 맨 끝에 있는 칸들은 위생적인 면에서 더 안전할까(be safer in terms of hygiene). 보이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다고(be not as simple or straightforward as it looks) 한다.

예를 들어(for instance) 노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단 하나의 세포만으로도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cause an infection) 병이 나게 한다(make you sick).

전문가들은 작은 종이 수건을 갖고 다니라고(carry your own towelettes) 권한다.

변기 꼭지를 눌렀을(press the flusher) 때뿐 아니라 들어오고 나갈 때 문과 걸쇠를 만지면서 손은 오염될(contaminate your hands by touching the door and latch)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을 씻은 뒤 가져간 종이 수건으로 닦고, 그걸로 수도꼭지를 잠그고(turn off the tap) 문손잡이를 밀고 나와 바깥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라고 한다.

질문 1 : 휴게소 공중화장실에서 가장 깨끗한 칸은?

답 : _____

질문 2 : 질문 1에 답한 근거 두 가지는?

답 : ① _____

② _____